

[목 차]

- 정권교체 시국토론회 인사말 (p5)

- 행사 식순 (p9)

- 제1 발제문 “왜 정권교체인가?” - 파사현정을 위한 노력 (p11)
홍성걸 교수(국민대학교 행정학과)

- 제2 발제문 “문재인 정권의 안보정책 평가와 대안” (p23)
신원식 국회의원(국민의힘, 전 합참의장)

- 토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한국경제의 미래전략” (p39)
강석훈 교수(성신여대 경제학과, 전 청와대 경제수석)

- 토론 “문재인 정부의 남북한 외교안보 관계 약속과 한계” (p59)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 토론 “정권교체를 해야 하는 이유” (p67)
제성호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정권교체를 해야 하는 이유” (p77)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왜 정권교체인가?”

『정권교체 시국토론회』 인사말

비상시국연대 이재오 공동대표

[정권교체 시국토론회 인사말]

인사말

국민여러분 !

세미나에 참석하신 시민여러분 !

우리는 민족사적으로나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로 보나 지금 역사상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선택의 지점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2~3년 안에 이루어지는 몇 가지 중요한 정치, 사회적 선택이 우리나라의 미래와 민족의 흥망성세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걷겠다는’ 문재인 정권 4년은 그 의미가 역사적 퇴행과 국가적 분열의 시대였음이 이제 분명해졌으며, 민주주의는 문재인 정권에 와서 분명하게 후퇴하였습니다.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은 역대 어떤 정권에서도 없었던 폭거입니다. 또 각종 비리로 얼룩져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되지 않는 모든 장관 후보들을 막무가내로 임명한 것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독재적 사고이며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최고 불통의 정치입니다.

또 ‘적폐청산’이라는 정치보복은 나라를 촛불과 태극기로 갈라 망국적인 분열을 일삼았으며 청와대와 관련된 부패와 실정을 진영대결로 치환하고 은폐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영대결과 분열정치는 망국적 행위임을 식민지와 분단의 경험을 통해 고통을 절감하고 있는 우리 국민을 다시 분열로 몰아넣은 행위는 역사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문재인 정권의 잘못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로 참담합니다. 양

적완화라는 정치적 수사를 통한 혈세 퍼주기식 선거에서의 대표행위는 자유당 시절의 고무신 투표보다 더 부도덕하고 악랄합니다. 집값 폭등은 또 어떻습니까? 청년실업과 고용절벽은 또 어떠합니까? 이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1년에 1만 7천명 국민이 자살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2019년 통계청) 이 같은 수치는 OECD 중에서 최고 자살률이며 동남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높은 자살률입니다. 나라의 미래는 또 어떻습니까? 미국, 독일, 중국 등 모든 나라가 4차산업 사회의 미래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오고 있는데 손 놓고 있다가 지난 5.18에 되어서야 'K-반도체' 프로젝트로 뒷북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이미 진행 중인 일을 새롭게 포장하여 발표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 외에도 문재인 정권이 저질러 온 실정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시민여러분 !

이번 대선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권교체를 이룩해야 합니다. 만일 정권교체에 실패하여 이대로 5년만 더 가면 우리나라는 팬덤에 의한 포퓰리즘 정치를 통해 베네주엘라와 아르헨티나와 같은 빈곤의 평준화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이것만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오늘 세미나는 전문가들이 나와서 문재인 정권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큰 줄기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우리는 정권교체를 통해
서방 7대 선진국에 진입하여 민족사의 가장 번영된 국가 !
다시 뛰는 코리아의 길로 매진해 나가야겠습니다.

비상시국연대 공동대표 이재오

[행사 식순]

□ 국민의례
□ 인사말
□ 좌장 소개
□ 토론회
□ 좌장 인사말 : 장기표 공동대표(비상시국연대)
□ 제1 발제 : 홍성걸 교수(국민대학교 행정학과) “왜 정권교체인가? - 파사현정을 위한 노력”
□ 제2 발제 : 신원식 국회의원(국민의힘, 전 합참의장) “문재인 정권의 안보정책 평가와 대안”
□ 토론
- 강석훈 교수(성신여대 경제학과, 전 청와대 경제수석) -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 제성호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 질의응답
□ 안내 말씀
□ 폐회

[정권교체 시국토론회]

제1 발제문

“왜 정권교체인가?”

파사현정(破邪顯正)을 위한 노력

홍성걸 교수(국민대학교 행정학과)

왜 정권교체인가?

파사현정(破邪顯正)을 위한 노력

홍성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sghong@kookmin.ac.kr

문재인 정부, 태생적 한계

- 1987년 민주화와 386 세대
 -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 4.19세대 등장, 민주당 정권의 내부 분열과 무능, 부패 만연, 도탄에 빠진 민생
 - 5.16 군사정변(1961): 경제발전 위한 구국의 결단 v. 군사독재정권의 출현
 - 10월 유신(1972): 1인 독재와 영구집권 위한 폭거 v. 경제위기와 안보위기 극복 위한 교육지책
 - 10.26(1979): 카터행정부와의 갈등, 핵/미사일 개발, 극단적 독재, 부마항쟁 등
 - 12.12(1979)와 광주(1980): 신군부 등장, 광주민주화 운동, 5공화국 출범
 - 6월 항쟁(1987): 대통령 직선제 요구, 386세대 등장, 8인 협의회 통한 개헌 합의, 6공화국 출범. 시민, 노동자, 농민, 학생 등 대부분의 국민이 전국적으로 독재에 항거한 결과, 민주화 쟁취했으나 혜택은 386세대의 몫 → 정치 엘리트로 직행

- 문재인 정부의 출범
 - 세월호 참사, 국정농단 사태 틈타 정권 쟁취
 - 박근혜 대통령의 부적절한 대응과 탄핵, 이어진 촛불시위
 - 문재인, 박근혜 탄핵 결정 당일 새벽, 팽목항에 내려가 쓴 방명록
 - 이어진 대선에서 1,342만3,800표(41.1%) 득표로 문재인 대통령 당선.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등으로 다수 후보 출마
 - 감성 정치의 귀재
 - 사람이 먼저다!
 -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취임사 중에서)
 - 정책 능력의 부재 + 나만 옳다
 - 모든 정책을 1차 방정식으로
 - 신흥 종교에 빠진 광신도와 유사

홍성걸(국민대학교)



애들아 너희들이 촛불광장의
 밤 빛이었잖아. 너희들의 흔적이
 천년 촛불이 되었잖아.
 비안하잖아. 고맙잖아.

2019. 3. 10

홍성걸

예로 들기에는 너무 많은 실패의 연속! (1)

- 소득주도성장
 - 대다수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여전히 옳다고 주장
 - 엄청난 이전 소득으로 막대한 예산 낭비하며 저소득층 지원해도 더욱 어려워진 삶의 질, 성장정책과 복지정책의 혼동
 - 4년 새 빈곤층 55만 명 증가: 반시장적 경제정책의 결과
- 급증하는 국가부채 비율
 - 재정건전성 악화로 미래 세대 부담 가중
 -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수 급증으로 더욱 악화
 - 선거 의식한 퍼주기 복지사업, 브레이크가 없다! 오죽하면 20대 청년들이 돈 쥐도 안짜는다고 절규할까?
- 표 의식한 공공사업 예타 면제 급증
 - 가덕도 신공항 등 여야 없이 이미 결정된 사업도 되돌리고 있다
 - 경실연 조차 "문재인표 대표 공항"이라고 주장

예로 들기에는 너무 많은 실패의 연속! (2)

- 25번 넘는 부동산 정책에도 아파트 가격 상승률 역대 최고
 - 부동산만은 잡겠다, 자신 있다, 믿어 달라던 대통령의 말
 - 청년을 버락거지로 만들다
 - 징벌적 부동산 과세, 상위 1% 대상 증부세가 이미 3.7%로 확대
- 땅에 떨어진 집권세력의 도덕성
 - 임대차보호법으로 세입자 보호한다더니 정책책임자들이 먼저 올렸다(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고위공직자 39명이 법 시행 전 전세값 올렸다!(매경, 2021.03.28), 노영민, 김조원, 박주민도 올렸다!(연합뉴스, 21.0329; 조선일보, 21.03.31)
 - 세종시 공무원, 공공기관 특별공급 → 세금 가지고 나눠 먹기, 공무원이라 쓰고 "특권계층"이라 읽는다!
 - LH 사태로 나타난 고위공직자, 시장, 군수, 시도 의원을 가리지 않고 막대한 부동산 투기 실태
- 검찰개혁 빙자한 검찰 장악!
 - 추미애, 박범계, 이성윤, 김오수...끝이 없다
 - 공수처의 사건 수사가 맘에 안든다고 공수처 때리기 아우성

홍성결(국민대학교)

예로 들기에는 너무 많은 실패의 연속! (3)

- 탈원전
 - 기후변화 탈피 노력으로 원전 증설 필수적임에도 우리는 탈석탄과 탈원전 동시 추진
 - 제조업 중심 국가의 전기요금 상승 불가피, 원전 생태계 붕괴
 - 2050 이산화탄소 제로 선언, 방법론은? 현실적으로 달성 불가능
 - 태양광, 풍력 과다 의존: 누구를 위한 것인가?
 - 김영환 전 과기부 장관, "탈원전은 미친 짓이다"
- 우리 사회의 균형을 잡아야 할 심판기관들을 모두 장악
 - 사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 검찰과 감사원만 장악하지 못하다가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시키고 최재형 감사원장만 남음
 - 친 정부인사들이 장악한 기관들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 진보 정치학자 최장집 교수의 경고
 -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촛불시위로부터 시작, 왜? 진보와 보수의 균형이 무너졌다
 - 촛불시위 이후 집권세력이 진보와 보수 이념의 갈등을 극대화시키고 사회를 편가르기하여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홍성결(국민대학교)

편가르기 정부, 실패한 정책 (1)

◆ 취임사에 약속한 내용

-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 권위적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다
- 제왕적 권력 나누겠다
- 권력기관의 완전한 독립
- 한반도 평화, 한미동맹 강화
- 분열 갈등의 정치 바꾸겠다,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
- 지지 여부 상관 없이 유능한 인사 적재적소에 등용
- 지역, 계층, 세대 간 갈등 해소

홍성결(국민대학교)

◆ 현실에 나타난 내용

- 문파만의 대통령이 되었다
- 반대 의견을 무시하는 대통령: 야당 무시, 인사청문 무시
- 무소불위 대통령 권력
- 검찰 포함 모든 권력기관, 심판 기능 장악
- 남북대화 구걸, 한미동맹 균열
- 편가르기 정치, 야당 무시(청문보고서 채택 없는 장관급 인사 32명)
- 내편, 내 지지자만 쓰는 좁은 인사 풀
- 계층, 세대, 남녀 간 갈등 증폭

편가르기 정부, 실패한 정책 (2)

◆ 취임사에 약속한 내용

-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
- 깨끗한 대통령
-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 치지 않겠다
-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 덮지 않겠다
- 공정한 대통령
- 투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 상식대로 해야 이익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다
- 소통하는 대통령, 광화문 대화

◆ 현실에 나타난 내용

- 약속 안 지키는 후안무치(厚顏無恥)한 대통령
- 주변 인사들, 라임, 옵티머스 등 사건으로 불투명
- 부동산, 대북정책은?
- 울산 선거 개입, 조국 사태, 각종 통계 왜곡?
- 내 편에만 공정, 다른 편에는 한없는 불공정? (한동훈 v. 이성윤)
- 자기 편의 특권과 반칙은 눈감고 남에게는 한없이 냉정, 상식이 다른 집권 세력?
- 기자회견, 국민소통 횡수? 소통 대신 소통?

반면교사(反面教師) 필요

-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 왜 국민은 문재인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는가
 - 문재인인의 실종된 약속들
 - 조국 사태 이후 문재인, 조국 옹호 세력에 대한 반감 증폭
 - 반복되는 정책 실패에도 사과 한 마디, 책임 하나 지는 사람 없다! 모두 전 정권, 전전 정권, 야당 탓!
 - 386세대의 586 기득권 세력화로 밥그릇 지키기에 급급
 - 극도의 내로남불, 자신의 야당시절 주장을 모두 뒤집는다
 - 최악의 우선 정권
- 반복되는 집권세력의 오만과 위선은 문재인 정부만이 아니다!
 - 박근혜 정부의 공천 파동(20대 총선)
 - 콘크리트 지지세력에 대한 과다 의존
 - 여야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주장(내로남불)
 - 국민의힘 등 보수우파에 대한 국민의 평가도 마찬가지로 환구두와 백구두의 차이
 - 재보궐 선거의 결과: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부패와 무능, 위선과 부도덕에 대한 징벌이지 야당에 대한 지지 가 아니다!
 - 언제까지 상대의 실책에 의존할 것인가

破邪顯正을 위한 방안

- 기본 방향: 국민의 신뢰 회복 이외의 방법 없다!
- 잊혀진 문재인인의 약속 실천
- 도덕성과 품위 갖춘 보수우파 인재
- 정치인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 특권의식, 기득권 모두 버려라. 그리고 욕심을 버려라, 제발...
- 포용적 시장경제의 원칙과 범치주의 회복: 스스로에게 먼저 엄격하게 적용
- 필요 정책 방향 예시: 민주주의(국민이 주인) 회복, 모든 정책은 고차방정식으로 풀어야
- 포플리즘적 나눠주기 아닌 시장 기회 창출: 최악 상황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위한 경제 활성화 방안 제시
- 기업 투자 활성화: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위한 규제 철폐
- 부동산 정책: 시장 중심 해결, 교육/저출산/복지 정책 등과의 연계 필요
- 재정의 효율적 활용과 무너진 재정건전성 회복 위한 로드맵
- 안정적 복핵문제 관리 프레임
- 한미 동맹 공고화, 한일 관계 정상화

[정권교체 시국토론회]

제2 발제문

“문재인 정권의 안보정책 평가와 대안”

신원식 국회의원(국민의힘, 전 합참차장)

① 개요

- 문재인 정권의 안보정책은 총체적 실패
 - * 우리 안보의 2축[동맹(同盟)+자강(自強)]을 심각하게 훼손
 - 이념과 호오(好惡)에 기초한 위협인식
 - 위협을 가하는 측의 능력보다는 의도에 기초한 대응
 - 그 의도마저 오직 선의(善意)로 자의적 해석
- ※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했던 전통적인 안보관 토대 위에
시대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한 새로운 안보정책 정립이 긴급

② 국방분야 문제점 및 대안

○ 문제점

- **북한 군사 위협 증대로 남북간 전력균형 악화**
 - 북핵 대응을 위한 군사력 구축 지연
 - 우리 국방태세 약화를 초래한 남북군사합의 집착
- **한미연합방위태세의 약화 초래**
 - 북핵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미연합훈련은 지속 축소
 - 안보상황을 무시한 임기내 전작권 전환의 무리한 추진
 - 미숙한 방위비분담금 협상으로 한미간 이견 확대
- **미래 첨단 국방역량 구축의 지연**
 - 안보위협 변화와 과학기술 발전 추세의 적극적 반영 미흡
 - 육·해·공 각군의 이해 상충 등으로 인한 국방개혁 미진
 - 지상군 일방적 감축과 동원예비군 축소
 - 재난·질병 등 비전통 위협에 대비한 국가통합위기관리 미흡
- **포퓰리즘적 접근으로 군 기강해이와 경계태세 약화**
 - ※ 대적관 등 장병 정신전력 약화

○ 대안

1. 북핵 대비 강력한 억제력 구축 및 대응능력 확충

- 북한 핵위협 대응을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 핵 억제력 강화를 위한 한미간 전략, 계획, 훈련 강화 (핵 공유 추진 검토 포함)
 - 한미 미사일방어(MD) 협력 고도화
- 독자적 북핵 억제 및 대응능력 확충
 - 첨단전력에 의한 3축체계 조기 구축
 - ① 킬체인(Kill Chain) : 북 미사일 발사 전 파괴를 위한 능력 확보
 - * 北 SLBM 대비 수중 킬체인능력(수중탐지·조기경보·대잠 합동작전) 보강 병행
 - ② 한국형미사일방어 체계(KAMD) : 북 미사일 발사 후 요격을 위한 능력 구축
 - ③ 한국형 대량응징보복(KMPR) : 적 도발의지 원천봉쇄를 위한 능력 구비
 - 핵 방호수단 완비 및 민방위 체제 일신
- 남북군사합의 파기 또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한 군사합의 재추진

2. 한미연합방위태세 재건 및 전략협력 강화

- 한미연합훈련 및 미 전략자산 전개 강화
- 전작권 전환은 '조건' 충족 후 추진
 - 연합방위 주도능력, 북핵대응 필수능력, 한반도와 동북아의 유리한 전략환경
- 방위비분담금 협상 등 동맹현안 안정적 관리 체계 발전
- 글로벌 및 지역전략 인식공유 및 협력 강화

3. 미래지향적 국방개혁으로 첨단 자주국방 역량 구축

- 한국형 상쇄전략(Offset Strategy) 개념에 따른 선택과 집중
 - 북 비대칭 위협 등 현존 위협과 미래 잠재 위협을 우리의 첨단 과학기술로 극복
 - ‘先전력증강 後병력감축’ 원칙하 「국방개혁2.0」 전면 재정비
 - 사이버전 역량 조기 확충, 국가 R&D 역량과 국방 연계성 강화
 - 예비전력 정예화 및 첨단화

- 저출산·안보인식 변화 등 시대 흐름에 부합하도록 병력구조 정비

- 안보현실에 기초한 대적관 확립 등 장병 정신전력 확립
 - 국방백서에 주적(主敵)개념 명확화
 - ※ 主敵 개념 희석 → 장병 정신무장 약화 → 軍의 임무와 역할 혼란 → 국방력 약화
 - ※ 敵은 구체성이 있어야 하며, 명확해야 함. IS, 사이버테러 등 정체불명의 테러도 포함하여 망리한다면 더 큰 혼란과 정신전력의 무력화만 초래
 - 지켜야 할 국가적 가치를 위협하는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인식토록 장병 대적관(對敵觀) 교육 강화
 - ※ 대한민국의 군사적 현존 위협 : 北
 - ※ 6.25전쟁 이후 북한의 침투·도발 횟수 : 3,120건 (2020 국방백서)
 - ※ 6.25전쟁 이후 북한의 침투·도발에 의한 사상자 수 : 사망 508명, 부상 436명

- 재난·재해 등 비안보적 위기까지 포괄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적 통합위기관리체제 구축

③ 외교분야 문제점 및 대안

○ 문제점

- 국제사회의 비핵화 공조 훼손, 한국에 대한 신뢰 추락
 - 북핵 해결을 미북협상에만 미루는 무책임한 태도로 방관자 전략
 - 북한 일변도 외교와 설부른 제재 완화 시도로 북한 대변인 노릇

- 한미동맹의 약화 및 주변국 관계 악화 초래
 - 한반도, 지역, 글로벌 차원의 한미공조 손상
 - 주변국 외교의 균형 상실 및 전반적 관계 악화 초래
 - * 사드 3불(不) 정책 등 대중국 저자세, GSOMIA 종료 시도 등 대일외교 악화
 -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등은 말뿐인 지역 외교

- 글로벌 외교 역량 결여로 국제적 위상 추락
 - 기후변화 등 글로벌 아젠다 리더십 실종
 -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외면에 따른 국격 저하
 - 뉴질랜드 주재 외교관 성추행 등 예방외교 실패

- 경제통상외교 부재로 국가 성장 잠재력 저하
 - 미중 무역전쟁, 기술 패권 경쟁 등 글로벌 환경 변화에 무대책
 -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수주 외교 포기

○ 대안

1. 책임있는 당사자로서 북한 비핵화 실현

- 한미 신뢰 회복, 심층 공조로 북핵 폐기 관철
 - 북핵 폐기를 위한 북한 비핵화 로드맵 실현
 - 비핵화의 가시적 진전을 위해 국제 제재·압박을 공고히 유지

- 주요국 및 국제기구와의 비핵화 공조 강화
 - 중·일·러 등 주요국과의 비핵화 협력 강화
 - UN, IAEA 등 국제기구와 긴밀히 공조

2. 한미동맹의 재건

- 한미간 전략 동맹 발전 및 미래 비전 구현
 - 북핵 해결, 평화 통일 등 미래를 위한 동맹 로드맵 작성·이행
 - 보편적 가치와 국제 규범에 기반한 지역 질서 협력 선도
 - 21세기 지구촌 도전과 위협에 대한 공동대처를 통한 글로벌 동맹 발전
- 동맹 공조 강화 및 협력 복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 양국 간 2+2 외교·국방 장관 회의, 확장억제전략협의체 (EDSCG) 재가동
- 자유무역, 항행의 자유 등 인도-태평양 지역내 협력의 틀 확대

3. 주요 주변국과의 관계 강화 및 역내 협력적 질서 창출

- 중국 : 상호 존중의 건강한 동반자 관계 구축
 - 국익과 주권적 판단에 기반한 당당한 외교 전개
 -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
 - 감염병, 미세먼지 등 역내 보건, 환경문제 공동 해결
- 일본 : 한일 관계의 리셋
 - 독도 및 역사 문제에는 단호히 대처, 국내 정치화 및 감정 외교 지양
 -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의 책임 있고 진정성 있는 해결 추진
 - 글로벌 현안·4차산업 등 미래를 위한 호혜적 협력 선도
- 러시아 : 한러 관계의 미래 발전 동력 확보
 - 북핵 외교의 정상화로 전략적 협력 강화
 - 에너지, 인프라, 농수산업 등 실질 협력 추진

- 중점협력국 확보 및 역내 지역 협력 강화
 - ASEAN·인도·중앙아시아·중동 지역과의 실질적 협력을 통해 신성장동력 발굴 및 외교지평 확대
 - EU·캐나다·호주 등과의 글로벌 거버넌스 협력 강화로 국제적 역할 제고
 - 동북아 역내 국가들과의 다자(多者) 및 소다자(小多者) 협력 등을 통해 보편적 가치와 국제규범에 기반한 미래 질서 창출

4. 글로벌 스마트 외교 전개

- 환경외교와 공공외교 강화로 중견국 협력의 구심점 역할 수행
 - 기후변화 대응, 녹색성장 및 미세먼지 해결 등에 리더십 발휘
 - 4차 산업혁명 시대 ICT 강국 역량 발휘 및 글로벌 차세대 인재 양성
 - 지한(知韓) 네트워크 조성, 한류(韓流) 확산 등 문화 및 공공 외교 강화
- 글로벌 리더십 구축 및 국제 질서 형성에 주도적 역할 수행
 - G20, APEC, ASEAN+3, EAS 등에서 거버넌스 역량과 지도적 위상 강화
 - 인간안보, 신종위협 대처, 개발협력 등 건설적 국제 협력 선도

5. 맞춤형 경제통상 외교로 성장과 일자리 창출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된 글로벌 경제 환경과 통상 거버넌스 대처
 - 비대면(Untact) 경제 시대에 산업 해외 진출 및 협력 지원
 -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통상 규범 정립 대처
 - 재외 공관의 기업 해외 진출 지원 및 업무 방식 개선
-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과 산업 질서 변화에 따른 전략 수립
 - 제조업 능력 기반 가치재(Merit Goods) 확보 및 해외 수출 지원
 - 지역 가치사슬(Regional Value Chain)내 중심 역할 확보

6. 해외여행자 및 재외국민·동포 보호 강화

- 재외 국민의 권익 보호 및 영사 서비스 업그레이드
 - 가칭 ‘재외동포청’ 설립 추진
 - 정부 및 재외 공관의 비대면 서비스 강화
- 해외여행자, 재외국민·동포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대책 강화
 - 재외국민 안전 대책 및 사건·사고 기민 대처
 - 현장을 찾아가는 적극적 서비스 추진
- 한민족 네트워크 지원 및 재외국민·동포 대상 한국어·문화·역사 교육 지원 확대

④ 남북관계 문제점 및 대안

○ 문제점

- **북한의 폭언 및 도발 행위에도 굴종적 태도로 일관**
 - 의도적 무시·모욕 발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에 침묵
 - (북한이 요구한) 탈북단체 전단 살포금지는 무조건 수용
- **말로는 통일과 교류협력을 외치면서, 실질적 협력은 후퇴**
 - 북한에 주도권을 상실한 채 실질적 통일기반 여건은 훼손
- **북핵 문제는 외면, 북한 비위 맞추기에 급급**
 - 맹목적 대북지원을 위한 제재 무력화 시도
- **이산가족 상봉, 북한 인권, 탈북자 문제 등 인도적 문제 악화**
 - 남북회담, 교류협력 등 남북관계 주요지표는 이전 정부보다 저조
 - 이산가족 상봉도 1차례 성사(이명박, 박근혜정부 각 2회)에 불과

○ 대안

1. 책임있는 당사자로서 북한 비핵화 실현

- 북핵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남북간 해결 노력 적극 추진
 - 방관자, 중재자 등 안이하고 무책임한 자세 탈피
- 남북기본합의서(5조 등)에 입각한 한반도 평화 구축
 - 정전협정 준수 하, 평화상태 전환을 위한 남북 및 다자간 논의
 - ※ 북한 핵문제 실질적 진전없는 종전선언 불가
 -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조치 (CBMs, confidence Building Measure) 등 추진
- 남북관계의 '정상화' 및 상호 존중의 원칙 준수
 - 상호주의에 입각한 합의 및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 관행 축적
 - 북한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합의 폐기 등 상응 조치 실시

2.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남북경제협력의 안정성 및 지속성 제고
 - 북한의 몰수 및 파괴행위 등 일방적 조치 금지, 사과 및 배상 요구
- 북핵문제 진전에 따른 경제협력 강화 방안 수립
 - 인적·물적 교류, 대북 투자·협력사업 등 분야별 세부기준 수립
- 우리 국민 방북 시 신변안전보장 제도화
 - 북한 당국의 일방적 체포 및 구금 금지
- 북한 합의위반 시, 남북간 또는 국제적 구제방안 수립

3. 인도적 문제를 비롯한 분단 고통 해소를 일관되게 추진

- 이산가족문제의 조속한 해결 우선 추진
 - 실향민 고향 방문·성묘·화상상봉 등 정례화 추진

-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생사확인 및 조속한 송환 추진
- 북한인권재단 조속 설립 및 북한 주민 인권개선 노력 전개
 - UN 등 국제사회와 공조하에 북한 당국의 인권개선 노력 유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성공적 정착 지원 강화
 - 취업 등 자활능력 증진에 주력, 조속한 사회정착 여건 조성
 - 관련국 및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HCHR) 등 국제기구와 긴밀 협력

4. 재난, 보건, 환경 등 관련 남북간, 다자간 협력 도모

- 기후, 환경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간, 다자간 협력 추진
 - 청정개발체제(CDM), 친환경 에너지 개발, 수질 오염 방지 등
- 산불, 전염병, 수해 등 각종 재난, 재해에 공동 대응
 - 코로나 19 등 감염병 관련 정보 공유 및 의료약품 지원 협력
 - 산불, 공유하천 범람, 식물·동물 전염병(솔잎혹파리, 구제역 등) 협력
- 남북 협력과 국제기구 및 단체 협력을 병행 결합, 지속가능성 제고

5.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 준비 노력 강화

- 청소년 대상 통일 교육 강화
 - 올바른 통일관과 북한 바로알기 교육 강화
 - 초중고 교과내용 편성 및 각 대학 통일관련 강좌 개설 지원
- 남북 청소년 등 미래 통일세대 상호 교류 추진
 - 국제사회의 관련단체들과의 협력 및 공동사업도 도모
- 남북간 상호 방송 개방 추진
 - 우선 상호 실상 알리기에 중점을 두고 '시범사업'을 진행
- 통일시대를 대비한 미래협력과제 발굴 및 추진

- 북한 임산부, 영유아,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 영양식 및 의료약품 지원
- 국제기구를 통한 지속가능한 식량안전기금 마련

5 보훈분야 문제점 및 대안

1

○ 문제점

-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가 현저히 미흡**
- **나라를 위해 희생한 호국 영령에 대한 모독**
 - 보훈단체의 정치화
- **국군포로 송환에 대한 정부 노력 전무**

○ 대안

1. 정부와 지자체의 보훈 관련 제도와 문화 혁신

- 나라와 국민을 위한 헌신·희생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가족과 유족에 대해 충분히 예우·보상할 수 있는 선진보훈 체계 구축
- 독립 및 참전 유공자 가족 및 유족 지원 확대
- 보훈단체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2. 국군포로 송환 및 군 유해발굴 사업 확대

- 국군포로 송환과 가족 지원을 위한 실효적 방안 모색
- 군 유해발굴 사업 확대

3. 6·25 참전국과 우리 군 해외파병 국가를 망라한 보훈외교 강화

[정권교체 시국토론회]

토론

강석훈 교수(성신여대 경제학과, 전 청와대 경제수석)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과 한국경제의 미래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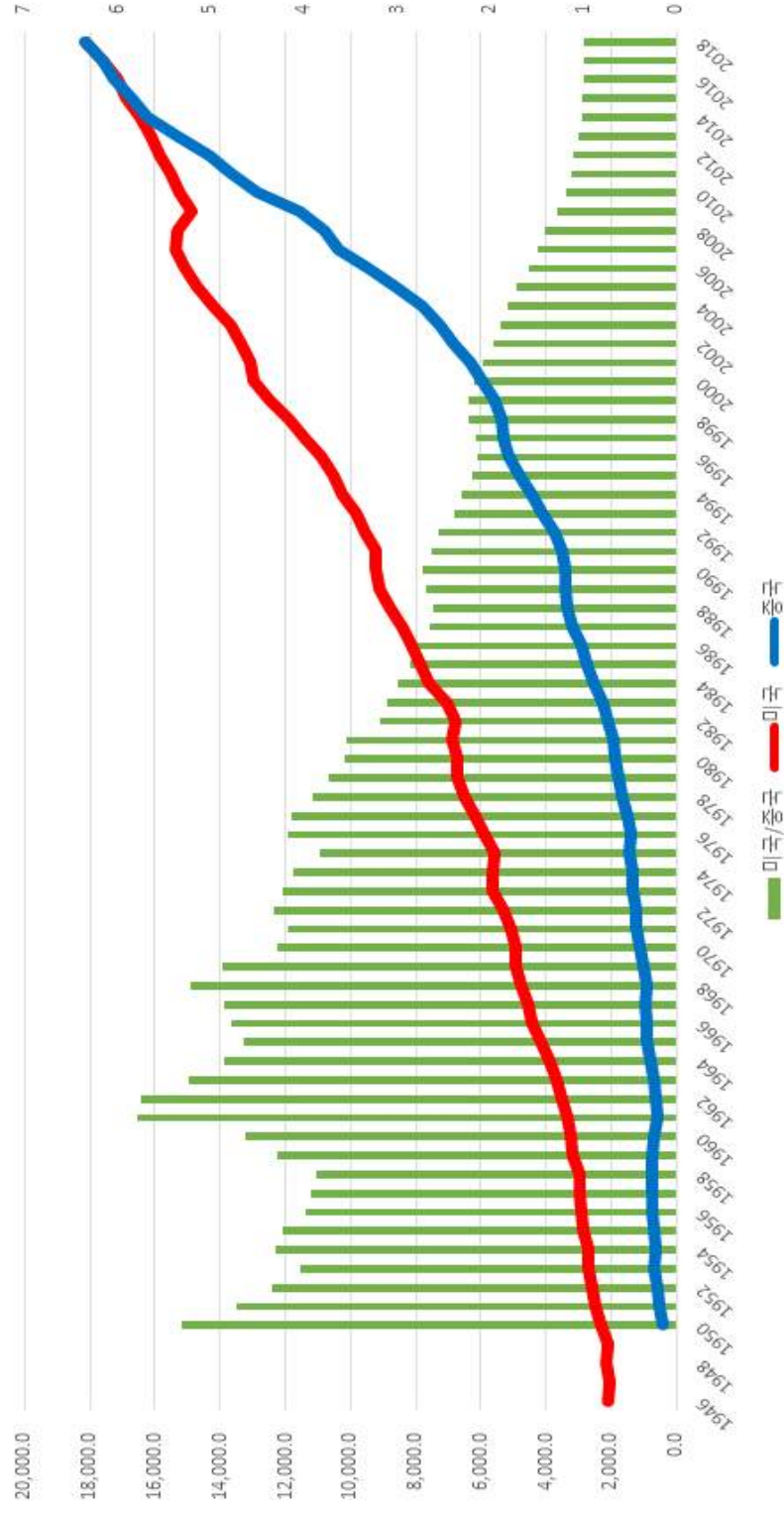
2021.5.28

성신여대 경제학과 강석훈

한국경제의 당면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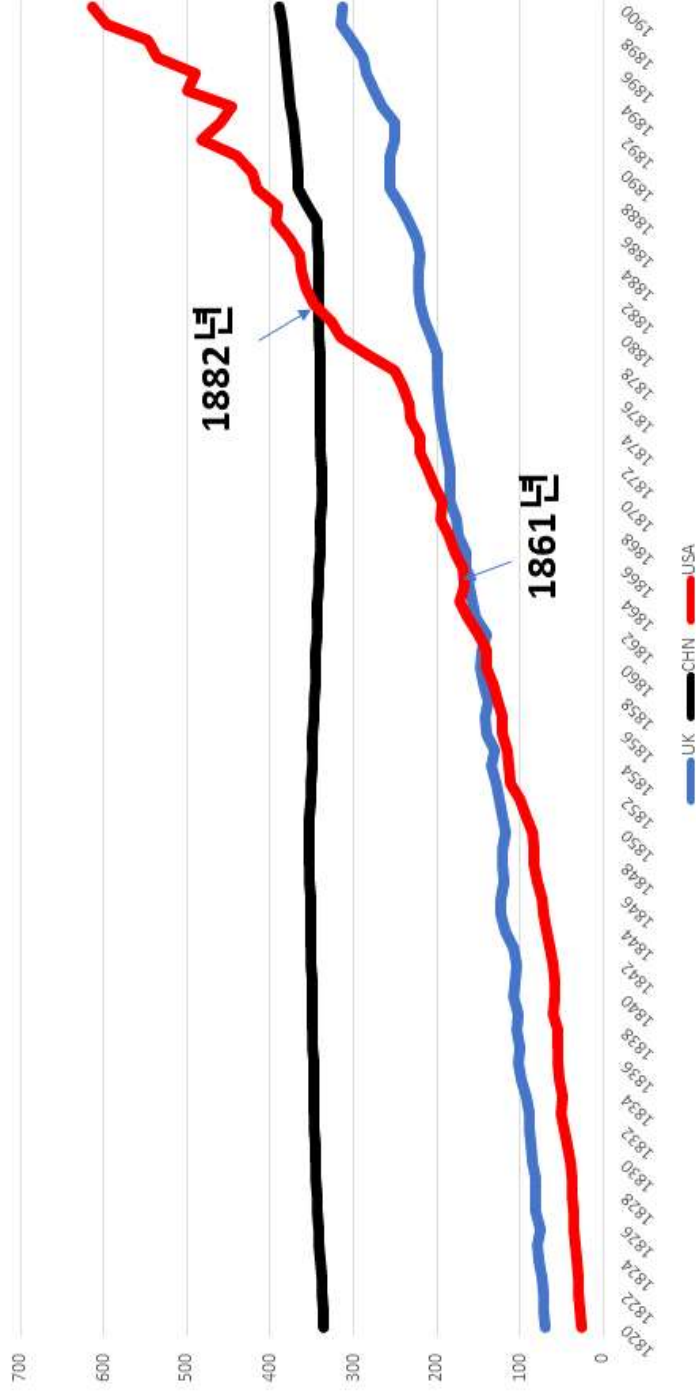
- ✓ 국제 과제
 - G2대결과 경제와 가치(인권, 저탄소 등) 공유시대에 통상 및 산업, 경제 전략 수립
 - 무제한 통화공급과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시대의 글로벌 경제 리스크 대응전략 수립
- ✓ 국내 과제
 - 저출생 고령화 극복하기
 - 저성장 돌파하기
 - 소득분배 악화 개선하기 (복지제도 완성하기)
 - 포플리즘 확산 방지하기(재정건전성 유지하기)

3차 경제 대전 : 미국 VS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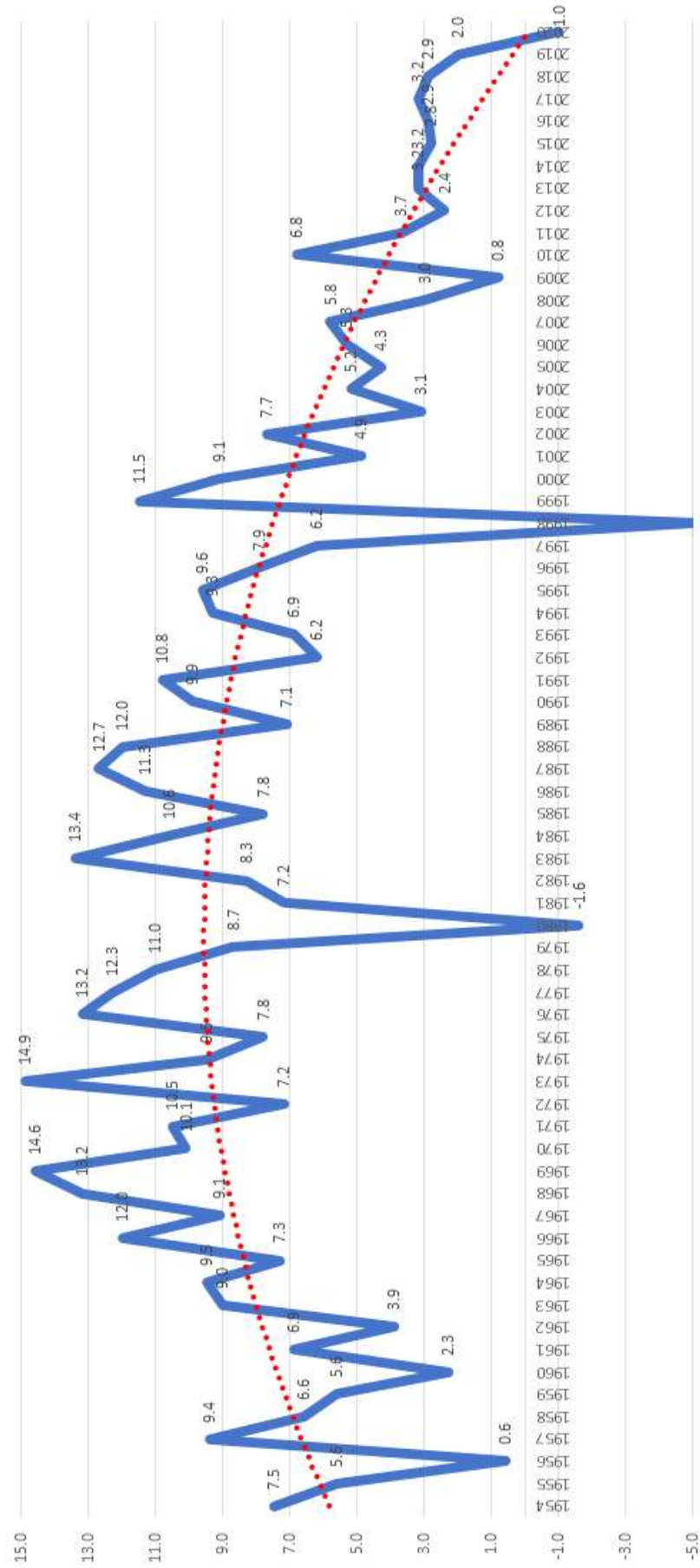
Source : Maddison Data.

0차 경제 대전 Rematch? : 미국 vs 중국



Source : Maddison Data, 중국자료는 직선 보간

국내총생산(실질성장률, 2015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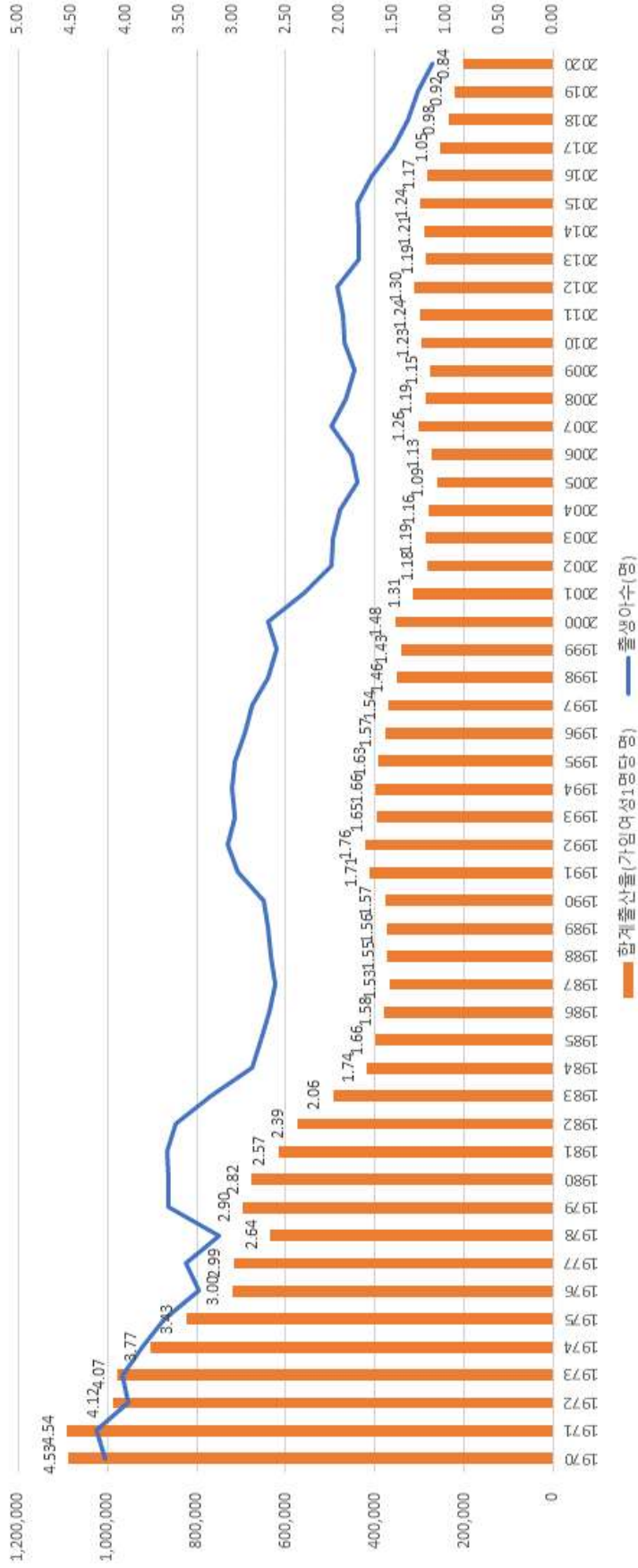
OECD 세계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

구분	1995-2011 (A)	2011-2030 (B)	2030-2060 (C)	2011-2060 (D)	B-A	C-A	B/A	C/A
독일	1.4	1.3	1.0	1.1	-0.1	-0.4	0.93	0.71
이탈리아	1.0	1.3	1.5	1.4	0.3	0.5	1.30	1.50
영국	2.3	1.9	2.2	2.1	-0.4	-0.1	0.83	0.96
프랑스	1.7	2.0	1.4	1.6	0.3	-0.3	1.18	0.82
일본	0.9	1.2	1.4	1.3	0.3	0.5	1.33	1.56
미국	2.5	2.3	2.0	2.1	-0.2	-0.5	0.92	0.80
한국(K)	4.6	2.7	1.0	1.6	-1.9	-3.6	0.59	0.22
세계(W)	3.5	3.7	2.3	2.9	0.2	-1.2	1.06	0.66
OECD(O)	2.2	2.2	1.8	2.0	0.0	-0.4	1.00	0.82
Non OECD	6.7	5.9	2.8	3.9	-0.8	-3.9	0.88	0.42
K/W	1.31	0.73	0.43	0.55				
K/O	2.09	1.23	0.56	0.80				

자료 : OECD(2011.5), World Economic Outlook

참고 : 신석하(2019) 2011-2030, 2.6%, 2031-2060, 1.1%, 2011-2060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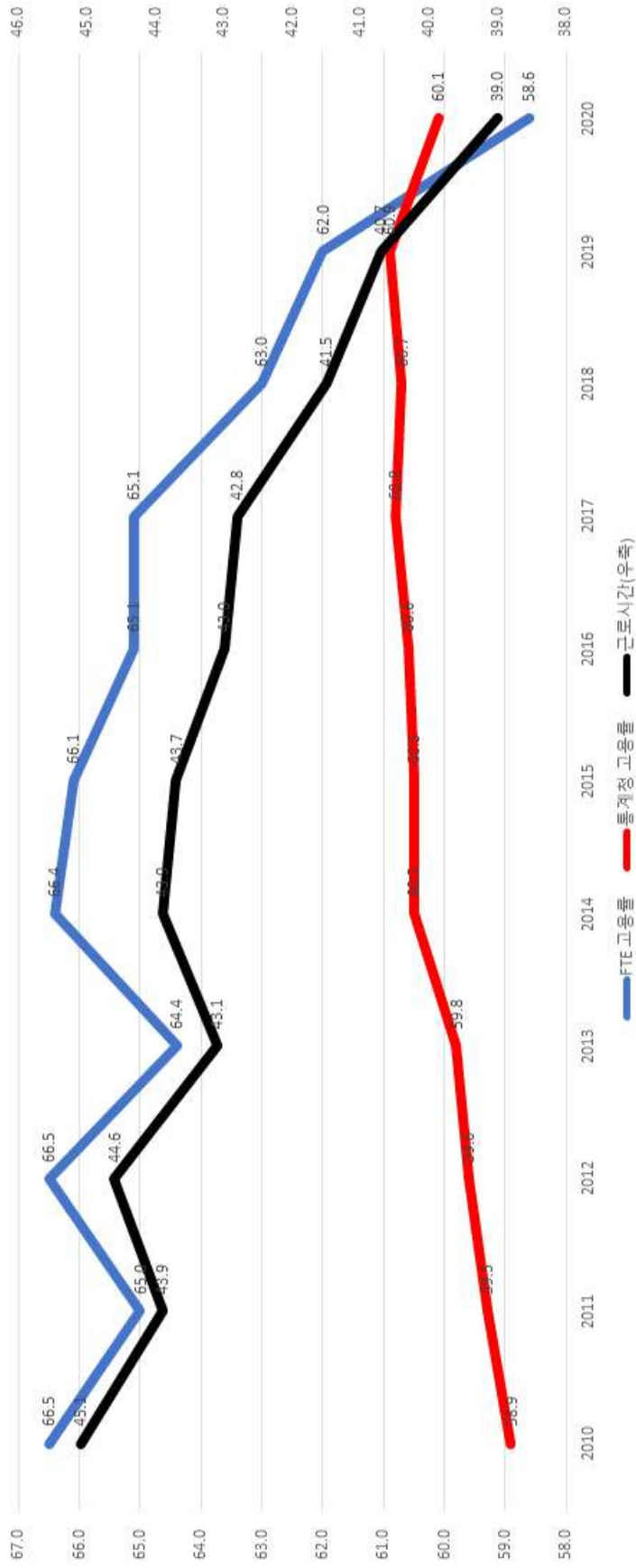
출생아수 27만명, 합계출산율 0.84



문재인정부의 대응전략

- ✓ 국제 과제
 - G2대결과 경제와 가치(인권, 저탄소 등) 공유시대에 통상 및 산업, 경제 전략 수립 : 국제통상 흐름에의 참여 미흡, G2 사이 전략적 모호성의 한계
 - 글로벌 경제 리스크 대응전략 수립 : 알 수 없음.
- ✓ 국내 과제
 - 저출생 : 등한시 또는 무효과(역대 최소 출생률, 최소 출생아 경신 중)
 - 저성장 : 소득주도 성장의 허구성, 혁신성장의 자기 모순성
 - 소득분배 악화 : 막대한 지출증가에도 균등분배로 인한 효과성 저하로 다수 사각지대 상존
 - 포퓰리즘 : 국가부채 급증 무시, 거대한 현금 살포

악화되는 고용상황(15세 이상 고용률)



자료 : 유경준의원실(2021)

알 수 없는 분배상황

소득 · 소비 · 자산

▶ 가계금융복지조사

▼ 가계금융복지조사(2017년 이후)

▼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17년)

▼ 가계금융조사(2010-2011년)

▼ 가계자산조사(2006년)

◀ 소득분배지표

☞ 소득분배지표 ※2021년 2011~2019

☞ 소득분배지표(연령계층별) ※2021년 2011~2019

▶ 가계소득지출

▼ 가계동향조사(2019년~)

▼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 2017~2018년)

▼ 가계동향조사(신분류 ~2016년, 소득부문 2017~2019년)

▼ 가계동향조사(구분류 ~2008년)

◀ 소득분배지표

☞ 소득분배지표 ※2021년 1990~2016

☞ 소득분배지표(선택가구, 상병 및 연령구분별) ※2021년 2006~2016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기 분배 지표가 개선됐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 불평등이 악화됐다”

통계청의 '2021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소득분배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6.30배로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0.59P(포인트) 줄었다.

알 수 없는 분배상황

<표1> 가계동향조사 주요 내용 비교

	~2016년 ¹⁾	2017~2018년		2019~2020년		2021년 ~
		소득㉓	지출	소득㉓ (19년만 실시)	소득㉓, 지출 통합조사(19~)	
조사대상	일반가구 (농림어가 제외)	일반가구 (농림어가 제외)	일반가구 (농림어가 포함)	일반가구 (농림어가 제외)	일반가구 (농림어가 포함)	
표본설계	다목적 표본	다목적 표본	진용표본	다목적 표본	진용표본	좌등
조사표	가계부	면접조사표	가계부+ 면접조사표	면접조사표	가계부	
응답기간	36개월	36개월	1개월	36개월	12개월(6-6-6)	
작성주기	분기(연간)	분기	연간	분기	분기(소득, 지출) 연간(지출) ²⁾	
공표범위	2인이상 비농림어가	2인이상 비농림어가	1인이상 (농림어가 포함)	2인이상 비농림어가	2인이상 비농림어가	1인이상 (농림어가 포함)

주: 1) 2006년 이후 1인가구 조사대상에 포함

2) 공표범위: 전체가구(1인 및 농림어가 포함)

참고 : 지니 계수와 5분위 배율 추이

지니 계수(2인 이상 도시가구)



자료 : kosis

5분위 배율(2인 이상 도시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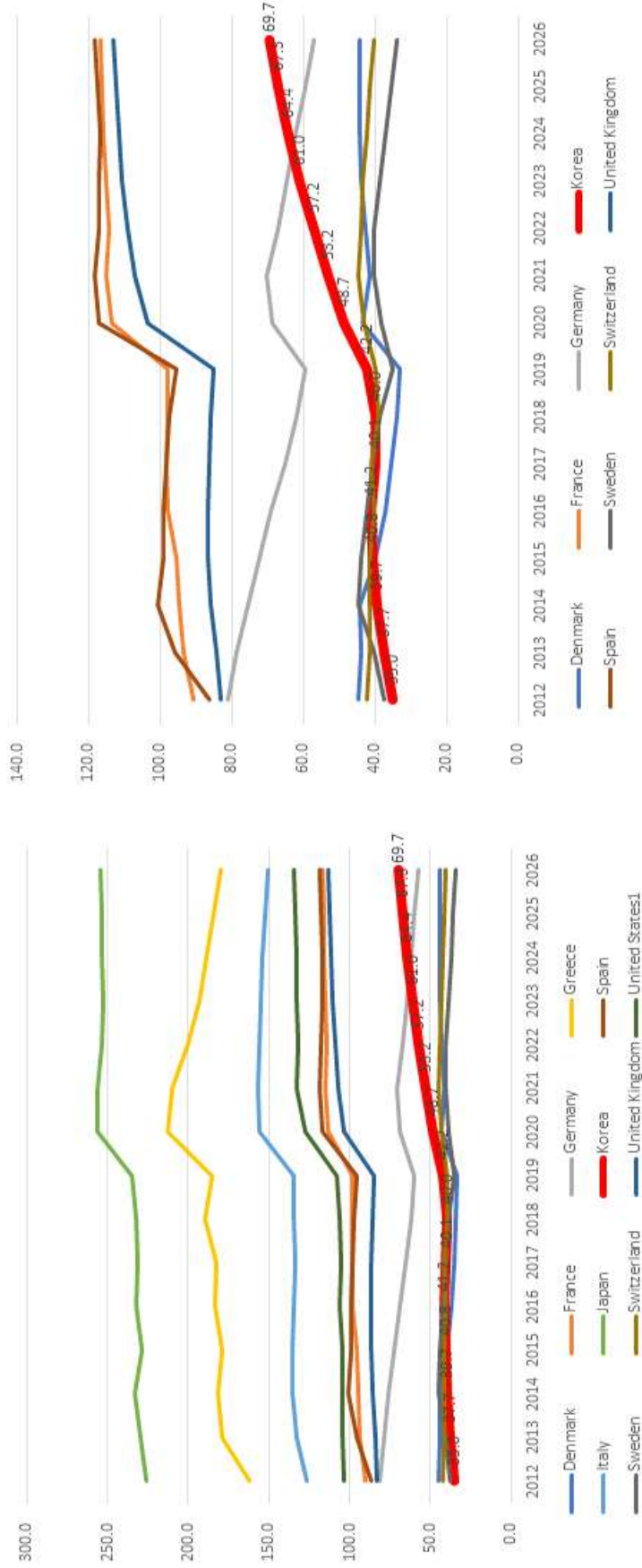


참고 : 상대적 빈곤율 추이

상대적 빈곤율(2인 이상 도시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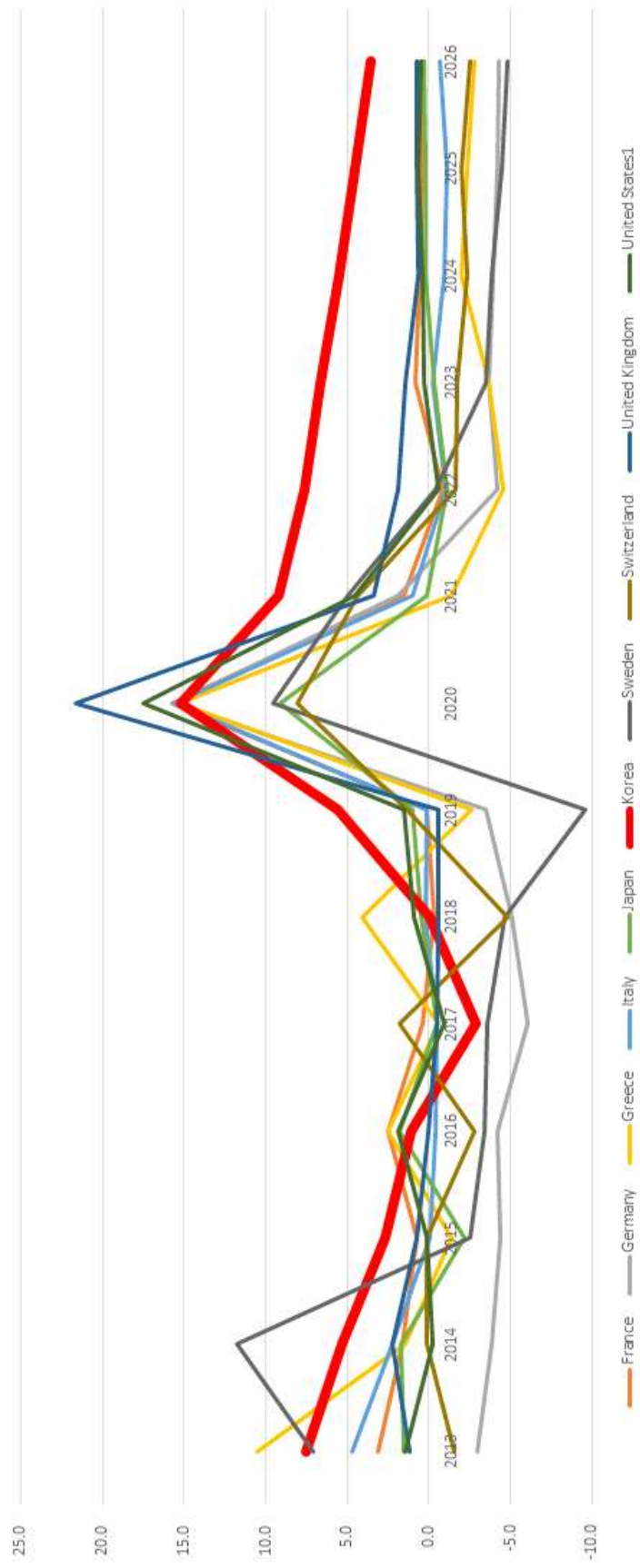


급증하는 국가부채



자료 : IMF(2021.4), Fiscal Monitor

악화되는 재정건전성 : 국가부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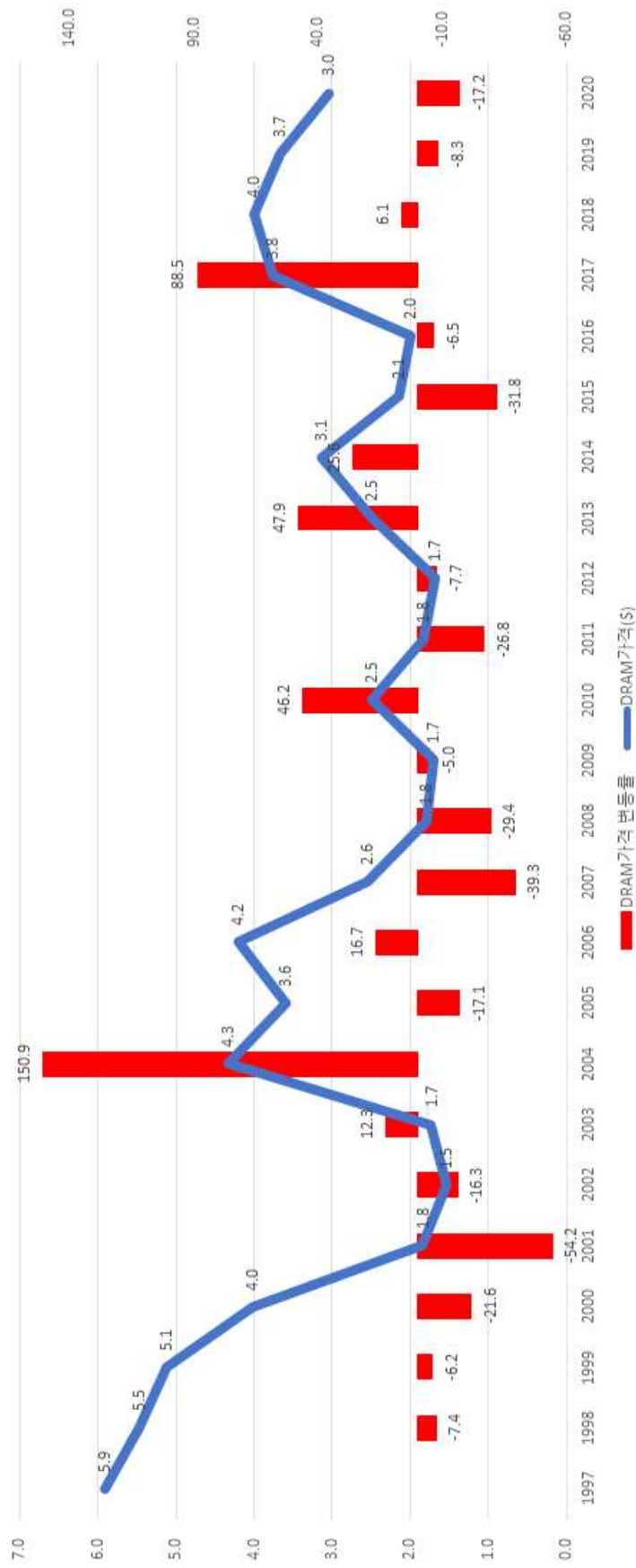


자료 : IMF(2021.4), Fiscal Monitor

매우 높은 반도체 의존율



리스크가 매우 높은 반도체



한국경제의 미래 전략 : 대전환

- ✓ 재정투입 성장에서 총요소생산성 증대를 위한 혁신 성장으로 전환
- ✓ 일자리 소멸, 축소시대에서 일자리 창출 경제로 전환
- ✓ G2 협력시대에서 G2 대결 시대로의 변환에 대응되는 경제(성장)전략 전환
- ✓ 비과학의 이념 리더십에서 과학기반 실증 리더십으로의 변환
-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학교 교육과 평생 교육 재편을 통한 인적자원 관리 전환
- ✓ 노동-교육-복지의 일괄 개혁을 통한 촘촘한 복지체제로 전환
- ✓ 공기업 개혁, 국민연금 개혁, 재정 건전성 확보 등 공공부문 개혁
- ✓ 탄소제로를 향한 에너지 전환
- ✓ 저출생 고령화시대의 인적 자원 관리

[정권교체 시국토론회]

토론

"문재인 정부의 남북한 외교안보 관계 약속과 한계"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1. 문재인 정부의 약속

□ 약속

- 적극적인 한반도 비핵 평화프로세스 추진
- 문재인 정부의 출범 시 약속은 진정성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함
- 그러나 정권에 대한 평가는 진정성이 아닌 결과 성과를 보고 객관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그 결과를 평가하는 데에는 정책추진 과정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결정적 요인은 아님. 어느 시기에나 정책을 수행하는 데에는 어려운 사정이 있으며 이 어려움을 돌파하고 성과를 내라고 정권을 위임하는 것임

□ 경제정책의 성패는 밥그릇 크기를 좌우하지만 외교안보 실패는 밥그릇이 날아가는 문제

- 경제의 결과는 분명하게 드러남.
- 외교안보의 성과도 전반적으로 실패
한국의 대외위상 추락 : “혼밥 먹는 대통령, 아무나 흔들 수 있는 나라”
- 한미관계는 사사건건 이견, 미국은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음
대북제재 해제, 종전선언, 한미연합훈련, 전작권 전환, 유엔사, 싸드, 인도태평양전략, 쿼드, 클린 네트워크, EPN, 인권문제/ 5.21한미정상회담에서 시정되는 경향
- 한중관계는 불평등관계, 중국은 고압적이고 우리의 입장을 지지해 주지 않음
높은 산봉우리 대국, 작은 나라, 중국몽과 함께 할 것, 3불, 한한령, 중국 군용기의 KADIZ 수시진입, 서해의 어족자원 남획과 내해화, 동북공정, 북한의 입장지지
- 한일관계: 과거사 문제에 발목 잡혀 최악의 한일관계로 추락
한일청구권협정, 위안부 합의에 대해 부정과 긍정 사이에서 왔다갔다, 죽창가, 일본의 경제보복, 지소미아 철폐와 유지 번복, 대화요구에 대한 일본의 냉대
- 국제정세의 흐름에 대한 판단착오와 국익이 어디서 오고 어디서 침해되는지 혼동 및 한반도 문제의 본질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됨
- 2021.5.21. 한미정상회담은 미래 한미동맹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바이오 통신네트워크 5G 6G AI 에너지 양자컴퓨터 핵심원료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인도 태평양 남중국해 대만 해협 등 지역 안보문제에 대한 규범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미래 동맹의 확대 발전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자평

- 문재인 대통령 : 판문점 도보다리 풍경이 눈에 선하다,
하노이 미북회담 결렬이후 교착상태가 장기화되어 안타깝다,
지금 평화는 미완의 평화 불가역적 항구적 평화로 나아가야 한다(2021.4.27. 국무회의),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위기를 잠재우고 평화를 유지(21.5.10)
- 즉 현재 남북한 관계의 교착상태는 인정하고 있으나 현재의 교착 상태가 북한이 핵포기를 거부한데서 비롯되고 있다는데 대한 평가보다는 미국의 책임과 행동을 강조하는 경향, 미국에 대하여 양보를 통한 대화를 촉구하는 입장임
또한 남북한 관계에서 지난 4년동안 무력충돌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유효성을 강조하고, 남북한 관계를 재가동하여 성과를 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미국의 협조를 요구,
5.21 한미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목적

2.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4년 이후 한반도 평화는 왔는가?

□ 북한의 대남 군사위협은 더욱 증대

- “지난 4년간 무력충돌이나 군사도발은 없었다”(2021.3.26. 서해수호의 날),
“그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 평화가 일상화됐다”(2021.2.5. 정의용)
- 그러나 북한은 적대행위 중지를 약속한 4.27 선언, 9.19합평양선언을 파기
 - 2020.9.22.민간인(공무원) 총살 사건은 국제법을 위반한 대남적대행위의 극단
 - 창린도 및 중부전선 DMZ 초소 사격 등 군사합의 위반
 - 개성에 건설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2020.6.16.)
- 문재인 집권시기에 북한은 6차 핵실험과 화성14, 화성15 등 ICBM을 발사하고 핵무력 완성을 선언(2017.11.29.),
2019년 5월부터 초대형 방사포, 단거리 미사일을 19회 발사, 대남공격능력 강화
- 미국(트럼프, 폼페이오, 볼튼)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함. 한미연합훈련(키 리졸브, 독수리, UFG, 맥스썬더 등)은 중단됐고,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도 없음. 한미동맹과 군사대비태세 약화
- 북한은 핵기술을 더욱 고도화하겠다고 선언, 핵무기의 소형경량화·전술무기화, 전술핵무기 개발, 초대형 핵탄두 생산, 핵 선제 및 보복타격능력을 고도화,

극초음속활공 비행전투부 개발, 수중 및 지상고체 발동기 대륙간탄도로켓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2021.1월 8차 당대회)

- 북한은 적대행위 전면 중지 합의를 내세워 우리의 전력증강 사업이나 한미군사훈련의 중단을 요구, 9.19 남북군사합의가 우리를 일방적으로 구속하는 이상한 상황
- 북한의 핵무장으로 인해 남북한 간의 군사적 균형이 심각하게 무너진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를 말하는 것은 공허함

□ 북핵문제는 더욱 악화

- 북핵문제는 더 나빠졌다(2021.1.21. 토니 블링컨)
 - 북한의 핵시설은 계속 가동되고 핵탄두 소형화는 더욱 진전됐으며 (2020.8.5.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 보고)
 - 운반수단 특히 단거리 미사일과 대구경 방사포 등 남한을 겨냥한 공격무기와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완성(2020.11.18.미 CIA 보고)
 - 2020년 핵탄두 67~116개 보유(2021.3 아산-랜드 보고서)
 - 북한이 핵보유국의 길을 걸어왔고, 최강의 국방력을 다지는 길에서 순간도 멈춰 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전술핵무기 개발 선언 (2020.7.27. 6차 노병대회, 2020.10.10. 노동당 75주년, 8차 당대회, 김정은)
- 문재인 정부 기간 중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3차례의 미북정상회담 (판문점 회동 포함)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함
-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단호한 의지와 행동이 보이지 않음(2021.3 국가안보전략 중간지침, 2021.5 대북정책 검토)
- 5.21 한미정상회담도 대화나 비핵화의 계기로 작용할지 의문

□ 북한은 미국이 제기한 비핵화 방안을 거부하고 미국의 변화를 요구

- 북한은 6.12 싱가포르합의를 관계정상화(적대시 정책 폐기)-평화체제 수립-한반도 비핵화의 순차로 해석하는 듯
- 김정은은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비핵화 방안(핵무기·핵물질 이전, 핵시설·핵프로그램 폐기 등)을 거부하고 2019년 말까지 북한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미국이 찾는 조건에서 조미대화를 할 수 있다(김정은, 2019.4.12. 최고인민회의)고 하면서 미국의 변화를 요구
- 내부적으로는 정면돌파전, 자력갱생·자력부강·자력번영 노선을 선언(김정은,

- 2019.12월 7차5기 당중앙위 전원회의)은 “미국과의 장기적 대립을 예고하는
 조성된 현정세는 우리가 앞으로도 적대세력들의 제재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각 방면에서 내부적 힘을 보다 강화할 것”, 핵포기 거부
- 미국은 우리의 핵을 빼앗는데 머리를 굴리지 말고 우리의 핵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데 머리를 굴려라. 우리를 다치지 말고 건드리지
 않으면 모든 것은 편하게 흘러간다(김여정, 2020.7.10.)
 -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는데 있으며,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8차 당대회)
 -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와 단호한 억제로 위협에 대처할 것이라는 데 대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구태의연하게 추구하는데 대하여 부득불 상응한 조치를
 강구하게 될 것이며 미국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5.2 외무성 권정근)

□ 남북한 관계는 완전히 단절

- 남북대화 중단은 물론 남북한 간 연락채널도 모두 단절(과거에 이런 일은
 없었음), 1971년 남북대화 시작 이전으로 회귀
 “남북 간의 모든 통신 연락선을 완전 차단하며, 남측과의 일체 접촉공간을 완전
 격폐한다”(2020.6.8. 김영철 김여정 대남사업부서 사업총화), 연락사무소,
 판문점 통신, 군사통신, 해사통신, 청와대-노동당청사 통신선 불통
-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남북한 관계 지표는 과거 정부와 비교해 봐도 최저,
 2000년 6.15 공동선언 이전으로 회귀

구분	인적 왕래(명)	물적 교류(\$)	인도 지원(원)	이산가족상봉(명)
이명박 정부	674,249	90억 9,700 만	2,577 억	1,960
박근혜 정부	352,825	65억 1,500 만	662 억	1,812
문재인 정부	18,062	4,300 만	395 억	887

- 북한은 인도적 지원물자(식량, 코로나 방역 물자 등)도 접수 거부

□ 북한은 남북한 관계를 적대관계라고 공식 표명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조롱

-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은)외세의존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좌고우면하면서
 오지랖 넓게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 제 정신을 가지고
 민족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로서 나서라(2019. 4.13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 이후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존중이나 신뢰를 보이지 않고 있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인도적 지원, 남북대화, 평화경제, 평화체제, DMZ 평화적 이용 등 어떠한 제의를 할 때마다 이를 거부하고 비난
즉 삶은 소대가리, 겁먹은 개, 가을 빼꾸기, 미국산 앵무새, 큰 바보, (수준이)바닥, 저능아, 세계 웃기는 사람, 설레발, 철면피, 꿀불건 등의 비속한 말로 경멸
- 북한은 남한에 대해 적대정책으로 전환했음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실행함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함”(2020. 6.8. 김영철 김여정, 대남사업부서 사업총화).
“남북관계의 현 실태는 판문점선언 발표이전 시기로 되돌아갔다”(김정은, 2021. 1월 8차 당대회)
“3년전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 임기말에 들어선 남조선 당국의 앞길이 매우 고통스러울 것”(김여정, 2021.3.16. 담화)
- 대외적으로는 북한이 한반도 전략적 문제 협의에서 문재인 정부를 배제하고자 함
 - 북한은 미국과만 대화할 것이니 문재인 대통령은 어부지리를 얻기 위해 기웃거리거나 끼어들지 말고 빠지라고 하면서 문 대통령이 조미관계를 중재하는 듯 여론화하여 몸값을 올려보려 하지 말라고 함(외무성)
 - 2019년 6월 30일 판문점 트럼프-김정은 회동시 문 대통령의 동참을 거부(J.볼튼)

3.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가?

-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평화가 더욱 위태롭게 됨. 6.15 이전의 대결시대로 회귀
 - 문재인 정부가 집요하게 구애하고 참고 양보하고 한미훈련 중단하며 북한에 정성을 들였는데 북한은 핵전력을 강화하고 문대통령을 조롱, 남북관계는 0
 - 한반도 평화가 어디에서 오는가? 우선순위를 잘못 파악한 측면과 정세판단에 미숙하고 접근법이 잘못돼 비핵화, 남북한 관계 진전, 한반도 평화체제 등 총체적 실패
 - 1990년대와는 정세가 완전히 변했다. 정세를 읽지 못함
 - 북한은 핵무장을 했고, 북한은 남한의 군사력을 무시
 - 대북정책의 전제인 튼튼한 안보가 보장되지 않음.
 - 국제질서는 미국이 독주하던 시대에서 중국이 부상하여 패권경쟁 중이며
 - 중국이나 소련이 북한을 도울 형편이 아니었는데 이제 중국이 도울 수 있는

상태가 되어 북한이 남한의 도움에 매달리지 않음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일방적 교조적으로 추진했으나 동의를 없음, 상대가 있음
 - 대북제재 해제나 종전선언, 남북교류 등은 미국의 양해 없이 추진 불가
 - 북한도 평화경제 한반도 신경제지도 DMZ 평화적 이용 비난
 - 인도적 지원, 보건협력, 작은 교역, 개별관광 제안도 거부
 - 선 남북관계, 선 미북관계 구상이 미국과 북한에 의해 모두 거부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주장,
현실에 대한 오해와 착시 가능성

[정권교체 시국토론회]

토론

“정권교체를 해야 하는 이유”

제성호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권교체를 해야 하는 이유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소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에 살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가 정치.경제.사회.문화.법률 등 모든 삶의 영역에서 훼손되고 있는 까닭이다.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하고 이대로 계속 가다간 나라의 기초가 무너지고 곳간이 다 털릴지도 모른다. 그래서 반드시 바꾸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가이념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다음에서는 정권 교체를 해야 하는 이유 내지 당위성을 다음의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기로 한다.

I.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념 위협

문재인 정부 4년 여 동안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인 자유민주주의가 계속 훼손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는 ‘자유’를 강조하는 대신 평등에 치우친 좌편향의 정책을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촛불혁명 정부’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일도 적지 않았다. 이에 관해서 진보진영의 대표적인 학자인 최장집 교수는 “촛불을 자신들 뜻대로 해석하고 전유하며 ‘적폐정산’이라는 기조로 국가주의적 운영을 해왔다. 모든 문제를 ‘여론’이라는 이름의 의견집단에 기대어 결정하는데, 이는 법의 지배가 가능치 않은 전제정치가 이뤄지는 것을 의미한다. 정당 간 협의도 없고 반대를 적대시하며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것이 극심한 양극화를 초래했다.”고 일갈했다.

이와 관련해서 진중권 교수는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은 한국 민주주의를 발전 시켜왔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민주주의 수준을 87년 체제 이전으로 돌려버렸다. 운동권 세력은 오로지 ‘선출된 권력’으로만 민주주의를 이해한다. 군부독재에 맞선 직선제 민주주의. 그들의 인식은 딱 거기에 머물러 있다.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전두환하고 뭐가 다르냐.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권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규정한 바 있다.

특히 집권 여당이 강행 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해외에서도 ‘자유민주주

의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 법에 대해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휴먼라이트워치 등 국제인권단체, 미 국무부에 이어 미국 의회까지 비판했다. 크리스 스미스 미 하원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 원칙과 인권을 훼손하는 어리석은 입법”으로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면 처벌하는 5.18 민주화운동 왜곡 처벌법 역시 자유민주사회의 핵심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 틈만 나면 민주를 외쳐온 문재인 정권이 임기 말에 법치와 민주주의를 흔들 수 있는 법안들을 연쇄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자기모순이자 이율배반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는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개정안’을 밀어붙이면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한편,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 의거 도출되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합법정부”라는 법리와 대법원 판례를 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주창하는 건국이념과 헌법정신을 무시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II. 법치주의 붕괴

문재인 정부와 소위 ‘문빠’들은 ‘선출된 권력의 힘’을 강조하곤 한다. 그러나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모든 걸 다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집권 초기 탈(脫)원전 공약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관철시켰다. 법과 정책에 따라 집행되고 있던 원전 개발계획을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뒤집어버린 것이다. 여권은 ‘숙의민주주의’ 등을 내세워 합리화하려 했지만, 대의민주주의와 국회 입법을 경시한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공약이 법 위에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강정마을 대책위원회 소속 주민과 시민단체들의 불법 저지투쟁으로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가 14개월 지연됨에 따라 발생한 추가비용 275억 원에 대해, 국가(해군)는 2016년 3월 원인행위자(개인 116명과 단체 5개)를 상대로 34억500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구상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국무회의의 결을 통해 구상권 행사를 포기했다. 이에 대해 법치에 반하는 것으로, 대형 국책사업을 방해하고 국가 재정을 악화시킨 불법행위에 대한 관용은 신중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 정부가 보수우파가 거행한 집회시위에 대해서도 이런 선처를 베풀었는지 의문이다.

퇴임한 대통령과 배우자는 퇴임 후 최대 15년 간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희호 여사는 이 기간이 2018년 2월 24일 만료돼 경찰 이관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이현령비현령 식으로 법을 해석해 ‘청와대 경

호 계속' 지침을 발령했다. 즉 지침에 의해 경호법의 명문 규정을 무색하게 만든 것이다.

이 밖에 대통령의 하명수사(세월호 사건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재수사 요구 등),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용(살아있는 권력수사 방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기도, 법무부 장관(정무직)의 수사 승인제 발상, 청와대의 특별감찰관 불임명 행태 지속(특별감찰관법 위반), 정치권의 법관 흔들기와 대법원장의 영합적 행동, 북한인권법 공개기 지속 및 직무유기 등은 모두 다 법치주의를 땅바닥에 떨어뜨린 또 다른 예들이다.

이상의 사례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이중잣대에 해당되거나 법치주의를 훼손(특히 법 앞의 평등 원칙 위배)하는 것들이다. 이와 유사한 행위를 되풀이할 경우 법질서와 공권력의 권위를 훼손시킴으로 국민의 준법정신을 약화시킬 게 분명하다. 반면 떤법과 무질서가 기승을 부릴 것이다. 따라서 법적용에 있어 진영 논리를 극복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행태가 임기 말 전에 고쳐질지는 의문이다.

Ⅲ. 정의와 공정의 가치 훼손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어떠한가? 우리는 “기회는 불평등했고, 과정은 불공정했으며, 결과 또한 정의롭지 못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이른바 '조국 사태'라 함은 첫째, 조국 교수의 딸이 (1) 세 차례에 걸친 대학 입학 과정에서 모두 시험을 보지 않은 사실, (2) 한영외국어고등학교 2학년으로 유학반에 있던 2008년 12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십을 했던 경력으로 해당 연구소에서 2009년 3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제목의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되었고, 이를 2010년도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입학전형 당시 자기소개서에 기재하여 입학하게 된 사실, (3)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직후인 2014년 3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입학하면서 (본인의 장학금 신청이나 추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총동창회가 운영하는 장학 재단 '관악회'로부터 학기당 401만원씩 2회에 걸쳐 장학금을 받은 것과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성적 부진으로 인하여 유급을 당했음에도 6학기 연속으로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은 사실과 더불어, 둘째, 조국 교수의 아들의 (1) 대리 시험을 통한 조지 워싱턴대학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조국 전 장관 부부는 2016년 11월 1일, 12월 5일

미국 조지워싱턴대에 다니는 아들의 ‘Global Perspective on Democracy’ 과목의 온라인 시험(객관식 10문항)에 맞춰 대기하고 있다가 촬영한 사진을 아이메시지(i-message)를 통해 전송하면 각각 분담해 나눠 푼 뒤 답을 전송해 제출토록 한 사실)와 (2)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조국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아들과 공모해 2017년 10~11월 아들의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진학 시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 명의로 된 허위 인턴활동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미국 조지워싱턴대 허위 장학증명서 등을 제출해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음)를 가리키는 것이다. 또 조국 교수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 위조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다. 이들 부부는 기득권을 이용해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조차 어려운 기발한 발상으로 한국의 입학시험 제도를 마음껏 유린하고 이용했던 것이다. 이 ‘조국 사태’로 인해 ‘아빠 찬스’니 ‘엄마 찬스’라는 풍자 섞인 말이 생겨나기도 했다. 자칭 진보의 대표 인사로 불리는 조국 교수 부부의 위선적 행태는 젊은이들에게 ‘과정의 불공정’에 대한 분노를 자아낸 대표적인 경우였다. 과정이 불공정한테 결과가 정의로울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다른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태는 소위 ‘대통령 찬스’로 불공정의 분노를 자아낸 경우였다. 문재인 정부는 포퓰리즘 정책의 일환으로 집권 초기부터 ‘공공 부문의 무분별한 정규직화’를 밀어붙였다. 이러한 정책 노선에 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의 ‘인국공’은 용역회사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직고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청년들은 인기영합적이고 반(反)시장적인 정책에 대해 분노했다. 가뜰이나 좁아지는 취업난에 가로막힌 그들에게 이런 결정이 극도의 ‘불공정’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공공 부문에서 ‘방만 경영 통제의 원칙’을 무시하는 행태를 반복해선 안 된다. 대신 철밥통의 보호가 아니라 노동유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문재인 정부는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일부 직원들이 2018년부터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지역에 100억 원대의 토지를 투기성으로 집중 매입했다는 의혹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특공) 투기 의혹에 불거지면서, 관세청.기획재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행정안전부의 4개 부처가 감사원의 감사대상에 올랐다. 문재인 정부 아래 ‘특권과 반칙’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만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연애.결혼.출산.인간관계.내 집 마련’을 모두 포기하며 살아온 이른바 ‘5포 세대’들이 더할 나위 없이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다.

IV. 소득주도 성장과 자유시장경제질서 파괴

문재인 정부의 경제비전은 ‘사람중심 경제’이고 전략은 ‘소득주도 성장’이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선전해 왔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노선은 다분히 사회주의 경제정책 기조와 닮아 있다. 예컨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카드수수료 인하, 부동산 세금 인상, 유치원 공립화 등은 오히려 약자를 약탈하는 정책으로 변해버렸다. 그렇기에 시장의 역습으로 사회적 약자가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소득주도성장은 혈세만 낭비하는 일자리 정책으로 전락했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강성진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 의장)는 문재인 정부의 기업 적대시 및 자율성 훼손 등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적나라하게 고발한 바 있다.

“대기업과 기업인을 적대시하면서 다른 한편에선 손을 벌리고 있다. 그런 점에서 너무 위선적이다. 부가가치를 창출 못 하는 정치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세금을 내는 최대 원천인 기업에 정권 품 나는 일에 돈을 더 내놓으라고 으박지르고 있다. … 지금 정권은 기업인의 이윤 창출 행위 자체를 죄악시키고 있다. 자본가와 기업인을 경제 양극화의 주범이라며 증오한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산업재해법의 경우 누가 봐도 사전 예방이 훨씬 중요한데, 최고경영자(CEO)를 구속할 수 있도록 못 박았다. CEO가 구속되면 기업 경영은 물론 노동자의 고용까지 흔들린다. … 같은 진보 성향인 노무현 정권만 해도, 민간의 역할과 시장 자율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 그러나 지금 정권은 민간과 기업 위에 군림하고 통제만 하고 있다. … 세금 납부 전 우리나라의 소득 분배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권인데 세후(稅後) 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OECD 최하위로 분류된다. 시장에선 소득 분배가 상대적으로 공정하지만, 정부 개입 후 더 나빠지는 현상이 문재인 정부 들어 심화하고 있다. 소득 분배 악화의 주범은 시장이나 기업이 아니라 현 정부다.”

그간 집권여당은 공정경제 3법, 상생 3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손실보상법) 같은 기업 규제법을 계속 쏟아낸 바 있다. 이에 대해 강 교수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기업들은 법인세 납부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정부 및 사회와) 공유했다. 이익공유법이나 사회연대기금법은 정부가 쓸 돈을 기업들이 더 내놓으라는 사회주의적 정책이다. ‘자발적으로’라고 하지만 누가 돈을 더 내고 싶겠나. 차라리 사회주의 국가처럼 기업을 국유화해놓고 동원하는 게 솔직하다.” 강 교수는 또 “노동자 가운데는 실업자, 휴업자,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자 등이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민노총 조합원 같은 정규직에게만 유리한 ‘친(親)정규직 노동자 중심 정책’을 펴고 있다. 그 결과 기득권을 가진 정규직들의 고용 안정성만 좋아지고, 20~30대의 일자리는

갈수록 줄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사회주의적 노동정책을 비판한다.

국민의 삶을 살리고 주름을 펴게 하는 경제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행복을 앗아가는 정책만 계속 고집하는 정부라면 우리가 바꾸는 것이 당연하다.

V. 국민의 안전·자유·행복 훼손·위협 방지

현행 헌법 전문에서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약간의 표현상의 차이만 있을 뿐 1948년 8월 15일 건국 때부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대한 국민과 그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대한민국이란 국가와 국가원수로서의 막중한 소임을 맡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확보해야 할 대상은 ‘안전과 자유와 행복’이다. 이는 최고의 헌법적 가치이자 국가목표인 것이다.

안전은 개개인의 신체적 자유와 안전은 물론 사회적 안전, 더 나아가 국가적 안전(안보)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각종의 사건·사고 및 화재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사분란한 대응, 마약·테러·전염병·자연재해 등으로부터의 안전장치 마련, 다양한 범죄 예방 및 진압과 신속한 피해자 구제, 국가 방위력의 확보와 철저한 경계 및 안보 태세, 북한 공산체제의 대남 혁명전략(전북 기도) 무력화 등 총체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자유는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통한 인간 존엄성의 실현을 의미한다. 행복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생활의 보장 및 각종의 사회복지 시스템 완비 등 최저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때 가능하다. 그러나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으로 개인의 행복이 충족될 수는 없다. 충분한 문화 및 여가생활의 보장과 같이 정신적 수준의 만족이 함께할 때만이 행복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특하면 세월호 사건을 내세워 이전 정부를 비난해 왔다. 그러면 과연 국민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위해 과거의 정부에 비하여 충분한 노력을 다해 왔다고 볼 수 있을까? 혹은 더 잘했다고 볼 수 있을까? 2017년 포항 지진, 2017년 인천 영흥도 선창1호 전복사고,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에서 발생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세월호 사건 때와는 다른 대응과 처리를 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빈축을 샀다. 그리고도 ‘사람을 위한’ 혹은 ‘사람을 중시하는’ 정부라고 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나온 것은 당연했다. 또 세칭 ‘정인이 사건’을 보면서, 지금 많은 국민들은 양부모 밑에 있는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그간 정부는 무슨 일을 해 왔느냐고 문재인 정부에

묻고 있다.

북한의 핵공갈, 각종의 대남 도발과 협박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도 의문이다. 일각에서 ‘평화 쇼’에 지나지 않는다고 힐난하는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연출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지금 안전과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십중팔구 아닐 것이다.

문재인 정부 아래서 국민들은 이전 대통령 치하에서보다 더 많은 자유를 구가하고 있다기보다는 자유가 제한 받고 살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감염증) 사태가 지속되면서 자유의 일상적 제한을 받아들이도록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방역체계에 대한 국민의 협력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백신 확보 수준에 있어 아프리카의 국가처럼 세계 100위 밖으로 밀려난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다. 집 값 폭등과 청년 실업, 영세한 자영업자의 생존 위협,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서민들이 겪는 생활고도 국민행복과는 거리가 멀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강행은 비정규직(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축소했고,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뒤흔드는 상황을 초래하였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그런데도 집권 여당은 덧셈의 정치, 야당과의 대화·타협의 정치보다는 국회의원 숫자에 의지하는 국민 분열의 ‘뺄셈의 정치’를 지속하며 이념적 양극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상의 몇 가지 예들에 비추어 문재인 정부에 대해 후한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VI. 자유민주통일의 여건 조성보다는 ‘북한 바라기 정책’만 고집

한 마디로 문재인 정부가 헌법 제4조에 입각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추진해 왔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평화경제론이라는 이름 아래 종전선언과 남북협력에만 매달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전략에 근본적 변화는 없었다. 북한 바라기정책으로는 자유민주통일로 가기 위한 선결조건인 ‘북한체제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반면 귀순의사를 밝힌 탈북민에 대해 헌법 제3조에 반하여 국민 지위를 부정하고, 고문과 극형에 처해질 북한에 강제복송한 사례,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5년이 지나도록 몽개고 북한인권재단을 설치하지 않는 행위, 대북전단금지법을 밀어붙이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 김일성 우상화 서적의 제작·판매를 허용하고, 서울 시내에 조선노동당 깃발이 휘날리도록 하고 친북 이적활동을 처벌할 수 없도록 갖은 노력을 다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명령인 ‘자유민주통일노선’과 명백히 배치된다.

게다가 자유민주통일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한미동맹은 한미연합훈련이 3년 이상 중단된 것에서 시사되듯이 계속 이완되어 왔다. 이번 문재인-바이든 대통령의 공동성명이 과연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한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볼 일이다.

[정권교체 시국토론회]

토론

“정권교체를 해야 하는 이유”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정권교체를 해야 하는 이유

국회의원 태영호

문재인정부에 들어와 통일부는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리는 ‘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 시켰다. 미국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한반도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화상청문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의 향후 영향 관계를 향후 한반도 인권상황 전반으로 확대하였다.

미국은 적어도 공산주의 독재정권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일관하게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유지해왔다. 우리 정부와 여당이 ‘대북전단금지법’의 당위성을 아무리 설명해도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시각에서 보면 인권 문제 가해자인 김정은 정권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인식을 털어 버릴 수 없다. 20세기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낸 대한민국이 21세기 북한 인권 문제에서 가해자 편에 서 있다는 국제사회의 인식 자체가 우리 국격에 맞지 않고 창피스러운 일이다. 북한 인권 문제에서 아무리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내세워도 설명이 안 된다. 국제사회는 북한만큼 인권유린 하는 국가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정부·여당의 ‘선택적 인권 보호’, ‘선택적 침묵’ 경향이 더욱 뚜렷해졌다. 지난 홍콩 민주화 시위, 이번 북한 인권 문제 등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 사태에 대해서는 규탄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도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연설에서 “남북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라고 하였다.

남북의 분단 역사에서 한 번에 수백, 수십 명이 하늘과 바다, 육지에서 죽어 나간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았지만, 이렇게 사람 하나 다치지 않은 사건을 놓고 남북의 정상급에서 힘을 모아 처벌하려는 일은 지금까지 없었다.

대통령은 연설에서 남북합의와 현행법을 강조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 합의한 범위를 훨씬 넘어선 법률이라는 점을 알고 있는지 의문이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김정은 정권에 적대적인 성격을 띠는 전단을 남북교류협력의 승인대상으로 정해놓은 희비극을 만들어 놓았다. 법으로 승인을 받도록 규율하려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승인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어야 하는데 당연히 승인을 해 주지도 않을 대상을 승인대상으로 규정해 놓고 거기면 처벌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남매가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라고 믿고 계시는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야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었을 때 대통령이 보인 모습과 이번 대북전단 문제와 관련한 대통령의 엄정한 자세가 이렇게까지 대조적일 수가 없다.

사실 같은 민족이고 동포인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외면하면서 다른 나라의 인권 문제를 논할 자격이 있는지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에 묻고 싶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도 역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했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 인권이사회는 19년째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현 정부의 공동제안국 불참은 올해로 3년째이다.

문재인정권에 들어와 김일성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대한 판매와 배포도 이루어질 상황까지 이미 와있다. 김일성 회고록을 여러 번 읽어본 당사자로서 본인은 이 책이 북한에서 어떤 지위에 있으며 향후 남북관계와 우리 국가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알고 있다.

김일성 회고록의 자유로운 출판유통이 허용되면 북한의 모든 언론, 저작물들의 완전한 개방으로 가는 첫 관문이 열리게 되며 국가 존립 보다 출판언론의 자유가 우선시 되는 새로운 사회적 풍조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의 감정이 김일성 회고록을 용납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는가이다. 수백만의 우리 민족이 김일성 때문에 희생되었고 그 아픔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김일성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가.

대북정책뿐 아니라 부동산정책, 소득주도 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안보와 외교, 정책의 무능함이 드러났다. 지금이야말로 국민들의 힘으로 정권을 교체해야 할 때이다.

<MEMO>

